

“세계교역 악화… 금융권 실물경제 강화로 악순환 끊어야”

인터뷰 |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올해 글로벌 교역환경이 가장 먼저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관세 인상과 이민 억제·감소 등으로 추려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이 현실화할 우려가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우리 수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자를 위한 지원책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 연구실장은 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융업권 및 기업 자금조달 담당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경기 부진이 신용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미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 이민억제·관세전쟁 현실화 우려 韓 수출환경 악영향 가능성 높아

◆ 올해 한국경제 주요 변수는?

김 연구실장은 2025년 한국 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를 지목했다. 현재 한·미 내외금리차 역전폭은 1%포인트(p)를 초과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지연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여력을 떨어뜨리고,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을 해친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에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중국경제의 회복 여부를 꼽았다.

그는 “현재 중국은 견조한 수출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장세가 약화한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및 IT 경기 향방 또한 경제의 중요 변수로 꼽았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에 관한 수요가 올해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의 생산 확대와 기술력 향상이 가속하고 있어서다.

김 연구실장은 “반도체 산업의 전방산업인 정보기술(IT) 경기의 회복속도는 어떠한지, 중국 업체의 기술 발전이 어떠한 속도로 진행될지, 범용메모리 분야에서 중국 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우리 수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선제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 자금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회를 통한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실장은 “향후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정부가 원화유동성 및 외화유동성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대응 방안들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산업별 성장전망과 금융권 대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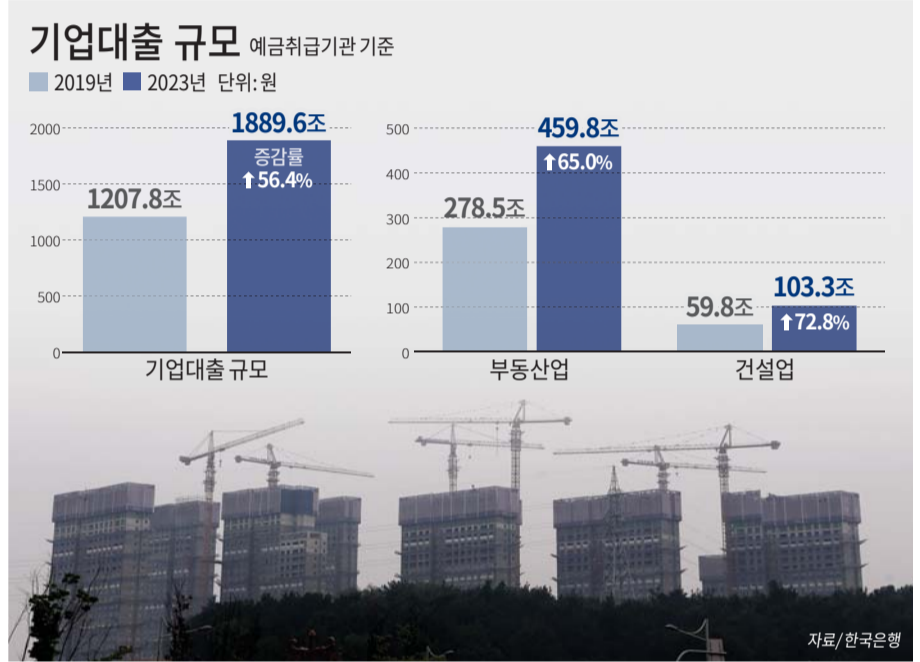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국내 정치적 불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장률 전망이 1%대로 낮아지고 있다. 그는 올해도 건설투자 분야의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관측했다. 선행지표인 수주가 감소세를 유지하면서다. 이어 소비 분야는 금리안하 기조에 따라 완만히 회복될 전망이다. 단 최근 국내 정치 불안정 등으로 지난해 12월 초 신용카드 사용액이 위축되는 등 회복 속도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연구실장은 수출 분야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교역환경 악화가 예상된다.

김 연구실장은 “최근의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이 수입 물가에 상방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 등은 예외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범용 반도체 中 점유율 확대 전망 원화·외화 유동성 대응책 마련을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방 압력 정부, 단계별 비상대응 재정비해야

주식시장서 외국인 순매도세 지속 다행이 채권시장 순매수세 유지중



김 연구실장은 내수 부진 정도를 주시하면서 긴축완화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되 최종(terminal) 금리수준은 경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립금리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일시적인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정부의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금융정책을 경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 및 주택시장 과열로 연결될 경우 경기부양이 퇴색된다는 의미다.

김 연구실장은 “상환가능한 범위 내의 대출이라는 금융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 소상공인이 내수 부진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금융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정치적 불안 여파 이어질까?

김 연구실장은 정치적 혼란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또한 주식에서는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 이벤트 발생 이전 추세와 유사한 수준이며 채권시장에서는 순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크 해소를 위해선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인들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단계별 위기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위기 관리수단을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안정화가 요구된다. 시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실장은 “외국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통 채널 또한 강화해 한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주요 약력

-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뉴욕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 한국은행 조사역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